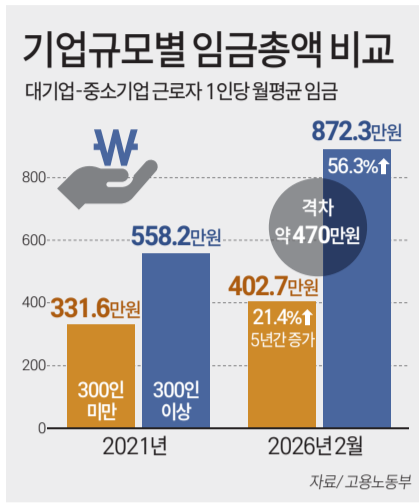


# 삼성電에 SK하이닉스 임단협까지 대기업 달리는데 中企 임금 어찌나

‘6억 성과급’에 中企 박탈감 확산  
5년새 임금상승 56% 대 21%  
상생·동반성장 제도 손질 목소리  
협력 中企 기여 인정·성과공유 필요  
납품단가연동제 안착 등 과제  
늘어난 지원정책 中企에 집중해야



‘최대 6억원’이라는 삼성전자 노사가 쏘아올린 공에 중소기업에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거대기업의 고액 성과급 결정이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특히 임금·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이달부터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업계에서 불거진 성과 배분 논쟁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체로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2026년 2월)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이 주로 속해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 402만 7000원, 대기업 등이 포함된 300인 이상 기업이 872만 3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 임금총액이 300인 이상 기업의 46.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021년 당시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이 331만 6000원, 300인 이상이 558만 2000원이었다. 5년간 대기업 월급은 314만 1000원(56.3%)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71만 1000원(21.4%)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2월 내놓은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 소득(보수)결과’도 월 평균소득은 대기업 613만원, 중소기업 307만원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가뜩이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 성과급 등 임금 인상 이슈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걱정만 더욱 부추기게 됐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 관련 제도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복수의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14년만에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데도 (이번 삼성사태처럼) 협력 중소기업의 공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청기업과 1차 협력사간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분배되고 나누효과가 커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노동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즉 ‘노란봉투법’과 이번 대기업 노사의 합의가 맞물리면서 하청기업들의 원청에 대한 성과 배분 요구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업체들도 원청업체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삼성의 결정은 중소기업 현실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경영자에게도 칼자루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연성 확보다. 전체 노동자 대상은 쉽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복수의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14년만에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데도 (이번 삼성사태처럼) 협력 중소기업의 공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청기업과 1차 협력사간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분배되고 나누효과가 커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노동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즉 ‘노란봉투법’과 이번 대기업 노사의 합의가 맞물리면서 하청기업들의 원청에 대한 성과 배분 요구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업체들도 원청업체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삼성의 결정은 중소기업 현실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경영자에게도 칼자루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연성 확보다. 전체 노동자 대상은 쉽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기보 6대 첨단산업 中企 지원

4925억 보증공급 나서  
기업은행과 금융지원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기업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기보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9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50억원을 기반으로 총 4925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 경남 등 4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중기부, 신규 특구 지정 절차 착수  
경남·경북·울산·전북 후보군 올라  
수소·대마·폐플라스틱 실증 추진

경남, 경북, 울산, 전북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보군에 올랐다. 경북 2곳과 전남은 글로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부는 4일 오후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특구는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보자에 오른 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기존에 제한했던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현 규정에선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 대체 연료로 재활용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

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구 후보지인 경북의 경우 국내에선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 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립스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에선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20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을 정비했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럭셔리 SUV, 고소득층 새 선택지로 부상



‘렉서스 LX700h’

럭셔리 소비, 실용성까지 따져  
대형 차체에 오프로드 성능 강화  
하이브리드로 출력·연비 균형



렉서스 LX 700h 주행 모습.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거 럭셔리 세단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대형 SUV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브랜드의 상징성보다 차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활용 가치를 우선시하는 소비 방식으로 진화하는 느낌이다. 과거 배우 주진모와 의사인 민혜연 부부가 구매하며 화제를 모았던 렉서스 LX 700h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강인한 성능으로 럭셔리 SUV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차량은 1996년 1세대 모델을 출시한 이후 현재 4세대 모델로 진화했다.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같은 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됐지만 더욱 고급스럽고 웅장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GA-F 플랫폼은 저중심화, 경량화, 차체 강성 향상 등 차량의 근본적인 특성을 향상시켜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질감 개선을 목표로 개발했다. 특히 렉서스 특유의 프레임리스 스텔 그릴, 슬립한 트리플 빔 LED 헤드램프, L자형 클리어런스 램프를 통해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인상의 전면 디자인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전장 5095mm, 전폭 1990mm,

축거 2850mm로 경쟁 모델인 BMW X7, 벤츠 GLS보다 차체가 약간 작고, 랜드로버 디펜더 130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한다. 또 BMW X7, 벤츠 GLS의 경우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한 반면 렉서스 LX 700h는 프레임 바디를 사용해 차별점이 있다. 이는 도심 온로드 주행보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차체의 기본 설계만 놓고 보면 메르세데스-벤츠의 G바겐에 가깝다.

특히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프레임 바디 차체에 렉서스의 모노코크 바디에 적용되는 서스펜션을 이식하고 전자제어 가변 램핑 기술인 AVS를 적용했다. 여기에 유압식 차고 조절 서스펜션을 적용해 주행 상황에 따라 차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고를 기준점에서 최저 27mm 낮추거나 최대 103mm까지 4단계로 차고를 조절할 수 있으며 유압식 차고 조절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차량 가격은 VIP 1억 9467만원, 럭셔리 1억 6807만원, 아웃도어 특화 오버트레이 1억 659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에코프로, 2028년 ‘AI 드라이브 컴퍼니’ 전환

전 가족사에 AI 업무체계 적용

에코프로가 생산과 연구개발 등 전 사업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전사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I)에 속도를 낸다. 에코프로는 AI 자율 실행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전사적으로 실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창립 30주년인 2028년까지 국내외 전 가족사에 AI 기반 업무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코프로는 올해 전사 데이터 표준화와 파일럿 과제 실행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8년에는 AI가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AI 드라이브 컴퍼니(AI Driven Company)’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제조와 연구개발 혁신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AI가 반복 실험 데이터를 학습해 소재 물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실험 조건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연구개발 리드타임을 기존 대비 50% 줄일 계획이다.

생산 현장에는 제조 데이터 플랫폼과 머신러닝 기반 AI 자율제어 환경을 도입한다. 전구체와 양극재 소성 라인 등에 ‘AI 자율제어 마더라인’을 구축해 현장 작업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관리 체계를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과 제조 생산성을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수출 中企 ESG 부담, 대기업과 함께 낮춘다

대중기업협력재단·KOTRA 공동 추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기업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은 KOTRA와 ‘글로벌 규제 대응 공급망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4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 대기업 접수 마감은 이달 24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

BAM)가 올해 본격 시행되고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주요 수출국의 ESG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공급망 ESG 실사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

KOTRA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62%는 ESG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